

## 취약계층 가족의 부부관계 증진과 빈곤 되물림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수립

수행과제명 :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대책 - 젠더적  
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〈가족·문화 부문〉

과제책임자 : 변화순 선임연구위원

Tel : 02-3156-7140, e-mail : hwasoon@kwdimail.re.kr

### 요 약

본 연구는 빈곤가족의 가족갈등 예방과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평가 및  
구축을 위해 부부관계성 차원과 청소년 자립준비도 측면을 분석하였다. 이를 위해 여성  
가족패널자료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, 양적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이 부  
부관계성과 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 보다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이나 동반  
활동, 청소년의 부모-자녀관계와 가정폭력 등의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 
나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가족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### 1.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

- ☐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족의 가족갈등을 예방하고,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
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서 빈곤가족의 특성을 가족관계와 갈등의 측  
면에서 분석함. 또한 빈곤의 세대간 이동 흐름을 학력과 빈곤 탈피를 위  
한 자립준비도 의지의 측면을 분석함.
- ☐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 가족에게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 내 역

할과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이혼 및 별거, 가정폭력 등을 야기함. 남편의 실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, 여성의 미취업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을 추론하게 함.

- 취업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짐. 부부간 역할 분담과 동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부부관계와 가정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.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불안은 가족내 자녀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가짐.
-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의 지속성, 장기성, 빈곤대물림의 고리를 끊거나 약화시키는 변화가 요구됨. 자녀들의 빈곤대물림 약화를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와 같은 문화적 성향 획득이 중요한 변수임.

□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이 처한 가정환경 요인(빈곤, 부모-자녀관계, 가정폭력, 지역사회환경)의 개선이 중요함. 이를 위해 부부관계성 개선에 대한 정책개발 또한 중요함.

## 2. 정책의 추진방향

### □ 가족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- 취약계층 “가족” 범위 확대 필요.
- “저소득층 문제가정”은 정상가족에 대응한 비정상가족의 이미지를 가지는 한계를 가짐. 이는 이는 현재의 다양한 가족 변화 논리와 맞지 않음.
- 부부공동 생계분담과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“다양한 가족”, 혹은 “유기체로서의 가족”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 필요함.
- 개념 정의의 작업은 구체화하되, 체계를 나누어 각 정책사업의 수준으로 재정리되어야 함.

- 사회복지 영역의 가족 접근은 문제중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임.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정책대상자 역시 아내폭력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안전망으로서의 제한성을 보임. 그러므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접근이 요구됨.

○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.

- 이용자 수, 교통, 시설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·설치되어야 함.
- 사회복지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의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필요하며,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체계의 중심이 필요함.
-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수가 도시에 몰려 농·어촌 지역의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족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서비스의 질의 지역 격차 심각함.
-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표준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있으나 가정폭력상담소, 지원시설,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직 사업 표준화 정도가 낮아 시설과 지역에 따른 서비스 편차 큼.

○ 사전적 예방사업과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.

- 가정건강가정지원사업은 “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”이라는 목표 설정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며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, 가족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.
- 사전적 예방의 사업 뿐만 아니라 사후치료적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부부관계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.

-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부여 필요.
  -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지역 관리하는 방안 마련함.
- 가족관계 증진에 있어 위험과 실질적인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.
  - 노인가족, 한부모가족, 장애인가족 등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에 따른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족활동, 가족생활만족도, 사회적 지원망 등의 다차원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발로 연결되어야 함.
- 소관부처 일원화와 관련기관의 연계방안 활성화 필요.
  - 가족안전망 정책을 관리·규제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 부처로 나뉘지면서 규제·지원·감독의 역할이 두 군데로 나뉘면서 네트워크의 효과성 미흡, 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이 부족하므로, 소관 부처 일원화와 유관기관간의 연계 활성화가 요구됨.

#### □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정책 제언

-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위한 코디네이터 위상 강화.
  - 지역별 조정협의 모임이나 기구를 통한 조정역할 수행으로 사업대상자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기관 연결 시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강화함.
- 신빈곤층의 대두로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.
  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-차상위계층의 아동·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함.

-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원.
- 정부의 단위시설 중심적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에서 지역공동체시스템 구축 지향의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방식 필요함.
-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,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, 드림스타트 사업이 교육-복지-건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가정-학교-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망 구축의 목표를 설정해야 함.
- 유사사업 통합·조정을 위한 부처별 유사사업을 1개 부처로 통합 운영.
- 소속부처에 따라 동일사업의 지원 금액, 평가내용과 평가방식이 다르며,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대한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개 부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 요구됨.

### 3. 정책효과

#### □ 가족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-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“가족” 개념정의를 통해, 문제 중심적이고 단편적 가족정책의 한계를 벗어난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하고 가족의 다차원적 욕구 실태 파악
- 가족정책 사업의 지역별, 시설별 편차를 줄이고 대상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 향상
- 사전예방적 성격의 가족정책 사업 패러다임 구축

- 중복된 가족정책 사업과 아동·청소년 정책에서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간 네트워킹 향상
-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대상 확대로 인한 세대간 빈곤의 대물림 차단
-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

- 
- ▶ 주관부처 : 여성가족부(가족정책과, 청소년정책과)
  - ▶ 관계부처 : 보건복지부
-